



22일 오후 김민제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권 의혹과 관련한 중간 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의 발표 모습 앞으로 최윤희 합참의장의 국감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안행위 지자체 무상보육 재정분담 여야 공방 법사위 대화록 유권해석 지연 외압여부 논란

## 국감 현장

### 국방위, 군사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강력 질타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 안전행정부,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감공사를 계속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NLL 대화록의 법적 지위문제, 안행위에서는 무상급식 문제,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법사위>=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이어 5월8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문의했으나,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미루다 6월달에만인 9월11일에야서 입장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제운영 규정 26조8항에는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한돼 있다"며 "이는 법령 위반으로, 국정원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해주어야 수사가 바로 갈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법제운영

규정 어디에도 '검찰 수사'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에 준한다는 해석을 내려 과장이 커질 것 같아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려해 왔다"며 "법제운영 규정의 취지는 준사법적 절차에 준하거나 재판이 예정된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위>=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무상보육 재정분담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공세에 열을 올렸지만, 민주당은 박 시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서울시 입장을 두둔하는데 주력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현 의원 "서울시 최대 현안이 무상보육인데 재정구조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걸 뒤돌릴 수는 없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며 박 시장에게 말을

넠졌다. 이에 박 시장은 "0~5세 보육과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다"며 "재원 분담이 문제인데 서울시는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 있으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일치를 통과의견 개정을 꼭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화상 의원은 "보육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다. 당연히 국가사수가 돼야 하고 예산도 100% 국고 지원해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 자립도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 기본인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낮게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글'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백근기 의원

은 질의자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도 "국방부 사이버수찰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내용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곳으로,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치적 성향의 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이날 국방부의 중간조사 발표와 관련해 설명을 내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와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레 기용 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광주 '징계교직원' 5명 중 1명 꼴 불복" 박혜자 의원

최근 5년간(2008~2012) 광주 시교육청에서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178명에 달했지만, 이중 42명이 재심을 청구, 24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징계 교원 5명 중 1명꼴로 징계에 불복한 셈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총지수 수, 시국선언, 간통, 성추행,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모두 178명이다. 이 중 교사가 122명, 일반직이 56명이었다. 징계 양형별로는 파면 2명, 해임 8명, 강등 2명, 정직 31명, 감봉 43명, 전책 50명, 불문경고 42명 등이 다.

같은 기간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상급기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42건으로, 이 중 24건이 애초 징계 양형보다 1~2단계 낮춰졌다.



### "대형국가사업 경제성만으로 결정해선 안돼" 장병완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22일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모델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기술성'과 같은 항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제성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사업 시행을 위

한 최종 결정에 외부전문가 의견이 미미하거나 원천 배제된 채 내부인사 의견이 주로 반영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R&D 사업은 2008년)부터 경제성 분석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던 형태에서 경제성 항목 외에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정책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분석하는 계층분석방법(AHP)을 도입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

지만,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B/C) 결과와 최종 사업 시행 여부 일치도가 R&D사업은 100%, 건설사업은 95%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경제성 평가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 "과세실명제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해야" 이용섭 의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내지 않은 세금이 1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가 1만

7975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2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 5조3012억원 보다 2.3배나 증가했다. 특히 심판청구가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5조5423억원으로 215.7% 급증했으며, 행정소송도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169.2% 늘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은 93.1%, 과세적부심 및 심사청구도 각각

39.8%, 25.5%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과세실명제 도입을 통해 납세자들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경기자 cki@kwangju.co.kr



### 해외 한국학자 206명, 국정원 비판 성명... "정부가 발표 막아"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개혁 요구 의견 등을 비판하며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해외 학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보안법을 꺼내 휘두르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

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피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잡한 수법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라며 "이러한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민 권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사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만약 노르웨이에서 보안기관과 군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 됐을 것이고 그 기관은 이미 해체수순을 밟았을 것"이라

고 비판했다. 해외학자들의 성명서 발표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는 "국정원 비판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외공관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한우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송지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등 해외의 한국학자 206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기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빌리지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구) 두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출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사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 칠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중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적합 대층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원흥·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 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회의실·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평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한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흥·투움·쓰리룸 927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층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사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실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법금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구) 두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할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중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신리 권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하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